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2002년 9월 17일, 제1차 일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오랜 세월 부인해 왔던 일본인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인 17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그 중 5명은 2002년 10월 15일, 24년 만에 귀국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안부가 불분명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22일에 열린 제2차 일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조사 재개를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서, 일본 정부는 북한 측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증거 제시가 없는 이상, 안부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는 모두 생존해 있다는 전제 아래 북한 측에 대해 생존자의 즉각 귀국, 안부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일조평양선언'에 근거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2011년 12월 19일에 발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에도 변함이 없다.

### 1

#### 배경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일본인이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행방불명이 되었다. 일본 당국의 수사와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에 따라 이들 사건의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납치 의혹이 짙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1991년 이후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 측은 계속 완강히 부인해왔다. 그러다가 북한은 2002년 9월 17일에 열린 제1차 일북정상회담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납치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 연락회('가족회') 결성

북한이 납치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범죄 행위를 한 배경에는 공작원에 의한 신분 위장, 공작원의 일본인화 교육을 위한 이용, 북한에 은닉 중인 '요도호(よど号)'그룹<sup>(주1)</sup>에 의한 인재 획득과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7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밖에도 소위 특정 실종자<sup>(주2)</sup>를 포함하여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필요



‘가족회’의 서명운동

한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와 조사 결과, 지금까지 일본 국내에서의 일본인 이외(조선적(籍))의 납치용의사안과 해외에서의 납치용의사안이 밝혀졌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1997년에 납치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 연락회(가족회)’가 결성되는 등 피해자 구명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지금까지 850만명(2012년 1월 현재)이 넘게 서명한 것을 총리대신에게 제출했다.

(주1) 1970년 3월 31일 일본항공 351편(통칭 ‘요도호’)의 납치범과 그 가족 등의 총칭.

(주2) 특정 실종자란, 민간단체인 ‘특정 실종자 문제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있어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종자를 의미한다.

## 2

###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북 간의 교섭

#### (1) 제1차 일북정상회담(2002년 9월)

(가)2002년 9월 17일의 제1차 일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랜 세월 부인해 온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시인하고 사죄하며, 납치 피해자 13명 가운데 4명은 생존, 8명은 사망, 1명은 입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측이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소가 히토미(曽我ひとみ)씨에 대해서 납치사실을 시인하고 생존을 확인했다. (한편, 북한 측은 그 후 조사에서 동시에 행방불명이 된 그의 모친인 소가 미요시(曽我ミヨシ)씨에 대해서는 입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관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동시에 가족 면회 및 귀국 편의 제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당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지속적인 조사와 생존자 귀국,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나)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 날에 납치 사건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 측이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 (2) 사실조사팀 파견(2002년 9월~10월)

2002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정부가 파견한 사실조사팀이 생존자와 면담하였으며 안부 미확인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힘썼다. 그러나 북한이 제공한 정보가 처음부터 제한적이었던 데다가 내용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의



24년만에 귀국한 일본인 납치피해자들

심스러운 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 측으로부터 마쓰키 가오루(松木薫)씨 '유골'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제출되었으나, 그 중에서 동일인과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10월 29일~30일에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일북국교정상화교섭에서도 정부는 150개 항목에 걸친 의문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더 많은 정보제공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으로부터 충분한 회답은 없었다.

### (3) 피해자 5명의 귀국(2002년 10월)

(가)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02년 10월 15일 납치 피해자 5명(치무라 야스시(地村保志)씨·후키에(富貴恵)씨, 하스이케 가오루(蓮池薫)씨·유키코(祐木子)씨, 소가 히토미(曽我ひとみ)씨)가 귀국해 가족과 상봉했다.

(나)일본 정부는 이들 납치 피해자가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도 포함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월 24일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계속 일본에 남도록 하는 한편,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 확보 및 귀국 일정의 조속한 확정을 북한 측에 강력히 요구 할 방침을 발표했다.

그 후 특히 이들 가족의 귀국 및 안부불명 납치 피해자에 관한 진상규명은 일북 간의 중대한 현안으로 협의되어 왔다.

### (4) 제2차 일북정상회담(2004년 5월)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당시)가 다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납치문제를 비롯한 일북 간의 문제와 핵, 미사일과 같은 안전보장 상의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회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두 정상 간에 합의되었다.

- 북한 측은 치무라 야스시씨·후키에씨의 가족, 하스이케 가오루씨·유키코씨의 가족 등 모두 5명이 이날 일본에 귀국한다는 데 동의한다.(소가 히토미씨의 가족 3명에 대해서는 그 후 7월 18일에 귀국 및 방일이 실현되었다.)



제 2차 일북정상회담(2004년 5월 22일)

- 안부불명의 납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즉각 진상규명 조사를 백지 상태에서 재개한다.

#### (5) 일북실무자협의(2004년 8월, 9월 및 11월)

(가) 2004년 8월 11일부터 12일(제1차) 및 9월 25일부터 26일(제2차)에 걸쳐 베이징에서 일북실무자협회가 열려 북한 측은 안부불명자에 관한 재조사의 중간 결과를 설명했다. 정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나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거나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나) 2004년 11월 9일부터 14일에 걸쳐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일북실무자협회는 50여 시간에 이르며, 북한 측 '조사위원회'와의 질의응답 외에 총 16명의 '증인'들로부터 직접 청취, 납치 관련시설 등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의 물적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3차 협의에서는 일본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에 납치당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특정 실종자 등) 문제에 대해 북한 측에 5명의 이름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해당 5명에 대해 입북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회답했다.)

(다) 일본 정부는 즉시 제3차 협의에서 북한 측이 제시한 정보 및 물적 증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24일에 대외 발표했다. 또한 다음 날인 25일, 북한 측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두 및 서면으로 전하고, 정밀조사 결과의 개요 및 요코타 메구미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감정결과의 요지를 직접 전달했다.

- 제3차 일북실무자협의를 통해 얻은 정보 및 물증에 '8명은 사망, 2명은 입북 확인 불가능'이라는 북한 측의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것은 없었다. 이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성의 없는 대응에 강력히 항의한다.
- 지금까지 제공된 정보 및 물증은 안부불명의 납치 피해자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에 너무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백지상태'로 되돌려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의문점이 있으며, 또한 요코타 메구미씨의 '유골'이라고 한 뼈의 일부에서 동일인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 안부불명의 납치 피해자에 관한 진상규명을 하루 속히 이행하는 동시에, 생존자는 즉각 귀국시키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신속하고도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으로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라)2005년 1월 26일, 북한 측으로부터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뿔조각에 관한 일본 측 감정결과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북한의 생각을 적은 1월 24일자 ‘비망록’이 일본 측에 전달됨과 동시에 ‘유골’의 반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2월 10일 북한 측 ‘비망록’에 대해 반론을 전달하고 거듭 생존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국과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후에도 2월 24일, 4월 13일에 북한 측으로부터 같은 내용이 전달되었기에 일본 측에서도 재차 감정결과와 객관성, 과학성을 언급하며 반론했다.

#### (6) 일북포괄병행협약(2006년 2월)

2006년 2월 4일부터 8일에 걸쳐 베이징에서 일북포괄병행협약(‘납치문제 등 현안사항에 관한 협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등 안전보장에 관한 협의’ 및 ‘국교정상화교섭’의 3가지 병행 협의)가 개최되었다. 납치문제에 관한 협의는 총 약 11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일본 측에서 거듭 생존자의 귀국, 진상규명을 향한 재조사, 피의자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생존자는 이미 모두 귀국했다’는 종래와 같은 설명을 되풀이했다.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의 있게 노력했다’, ‘조사한 사실을 그대로 회답했다’고 주장하고 안부불명자의 재조사 계속 조차 약속하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 인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 등의 주장을 하며 인도를 거부했다.

#### (7) 북한에 의한 탄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실시 발표(2006년 7월 및 10월)

(가)2006년 7월 5일 북한은 7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만경봉 92호의 입항 금지들 포함한 9개 항목의 대북 조치를 당일 실시하고, 이와 함께 북한 측에 이러한 조치의 내용 등을 전달하는 동시에 엄중히 항의했다.

(나)또한 북한은 같은 해 10월 9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엄중한 항의와 단호한 비난의 뜻을 표명하고, 같은 달 11일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및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 수입 금지를 포함한 4개 항목의 대북 조치를 발표했다.

(다)이러한 일련의 대북 조치는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고려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내린 결정이나, 북한 측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도 이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는 판단 재료의 하나로 작용되었다.

#### (8) 일북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2007년 3월 및 9월)

2007년 3월 7일부터 8일에 걸쳐, 같은 해 2월의 6자회담에서 설치하기로 결정된 ‘일북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 제1차 회담이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이 작

업부회에서 일본은 재차 모든 납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귀국, 진상규명, 피의자 인도를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 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등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대응은 보이지 않았다.

9월 5일부터 6일에 걸쳐 제2차 회담이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어, 제반 현안을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력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 행동을 실시해 가기로 합의했으나 납치문제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 (9) 일북실무자협약(2008년 6월 및 8월)

(가) 2008년 6월 11일과 12일, 북경에서 일북 실무자 협약이 개최되어 납치 문제에 관해 양국 단장들 간에 심도있는 절충이 이루어졌다. 일본 측에서는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 진상규명, 피의자의 인도를 재차 요구할 뿐 아니라 북한 측이 납치 문제를 포함한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할 경우, 일본이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중 일부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북한 측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했다. 그 결과, 북한 측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일'이라는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2008년 8월 11일과 12일, 심양에서 일북 실무자 협약이 개최되어 6월 일북 실무자 협약에서 양 측이 표명한 조치, 특히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북한 측이 본 조사에 권한이 부여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존자 발견과 귀국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개시하기로 함과 동시에 일본 측도 인적 왕래의 규제 해제 및 전세 항공편에 대한 규제 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08년 9월 4일 북한 측으로부터, 북한은 지난 일북 협약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갑작스러운 일본 정권의 교체(주: 당시 후쿠다 총리의 사임)로 신정권이 협약의 합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조사 개시를 보류하겠다는 연락이 있었다.

### (10)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실시(2009년 4월, 5월 및 7월)

(가)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일본을 포함한 관계 각국이 발사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4월 10일,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및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북한을 행선지로 하는 지불 수단의 휴대반출시 신고가 필요한 금액(하한액)을 100만엔 초과에서 30만엔 초과로 인하하고, 북한에 주소지 등을 가진 자연인 등에 대한 지불에 대하여 보고가 필요한 금액(하한액)을

3000만엔 초과에서 1000만엔 초과로 인하하기로 했다.

(나) 더 나아가 북한은 동년 5월 25일,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6월 16일, 북한을 행선지로 하는 모든 품목 수출 금지 및 '북한의 무역 및 금융 조치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외국인 선원의 상륙' 및 '그러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재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의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 이러한 일련의 대북 조치는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비추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지만, 납치 문제에 관해 북한이 2008년 8월에 일북간 합의한 재조사에 대해서도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 등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감안하여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 동년 7월 4일, 북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 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 (11) 북한의 한국 해군 초계함에 대한 어뢰공격(2010년 3월)

2010년 5월 28일, 일본 정부는 동년 3월에 북한이 한국 해군 초계함에 대해 어뢰공격을 한 것을 계기로 2009년 4월에 실시한 상기 (10) (가)의 금융조치에 대해 해당신고 및 보고를 요하는 금액(하한액)을 각각 10만엔 초과 및 300만엔 초과로 더 인하함과 동시에,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의 공조를 일층 긴밀히 하고 더욱 엄격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3

## 국제사회의 동향 ( 납치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



한일 외무장관 회담  
(2011년10월)

(1) 일본 정부는 G8정상회담 등 각종 국제회의, 정상회담과 같은 모든 외교상의 기회를 이용해 납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각국의 확실한 이해와 지지를 얻어 왔다. 예를 들면 2011년 5월 도빌에서 열린 G8정상회의에서는 납치문제에 관한 일본의 호소에 대해 참가국의 지지를 얻어 정상선언을 통해 G8으로서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또 미국, 중국, 한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 등에서도 각국은 납치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 예를 들어 2011년11월 일미외무장관회담에서, 겐바 외무대신이, 미국이 북미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언급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자,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행동을 취하도록 북한과 협의를 할 때마다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1년10월 일한외무장관회담에서, 겐바 외무대신이 납치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하자,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시 한번 지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찬동을 얻었다.

나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2011년12월에 열린 일중정상회담에서는 노다 총리가 납치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일본인의 안전 차원에서도 협력을 요청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에게 납치문제의 진전이 필수임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원자바오 총리는 일북 관계의 개선을 지지하며, 일북 양측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납치문제를 포함한 관련 문제들이 적절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1월일러외무장관회담에서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겐바 외무대신에게 납치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러시아도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일본은 6자회담에서도 납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005년 9월에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제반 현안 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6자회담의 목표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의 성과문서에서는 일북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의 설치가 결정되었으며, 10월의 성과문서에서는 일북 양측이 '일조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기초로 조기에 국교정상화를 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 또한 이를 위하여 일북 양측이 정력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실시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 말하는 '현안 사항'에 납치 문제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엔총회에서 일반토론  
연설하는 노다 총리  
(2011년9월)

(3)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는 한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귀국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의 증언에서 태국, 루마니아, 레바논에서도 북한으로 납치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외에 북한에서 귀환한 한국인 납치 피해자 등의 증언에서는 중국인 등의 납치 피해자도 존재한다고 한다. 납치문제는 국제사회에 공통되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제이다. 유엔은 2011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4년 연속 채택했다. 또 2011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상황결의가 7년 연속, 그리고 과거최다 찬성표(123표)를 얻어 채택되었다. 마르즈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1년 보고에서 전임인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마르즈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1년 1월과 2012년1월에 방일하여 일본정부 관계자 등과 의견교환을 가졌다.

## 4

### 일본 국내의 대처 상황

#### (1) 일본 정부에 의한 수사 및 조사

일본 정부는 2002년 9월의 제1차 일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안 및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귀국한 납치 피해자들의 수 차례에 걸친 협력을 얻으며 계속해서 필요한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수사 및 조사 결과, 지금까지 12건 17명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며 납치용의사안의 피의자 10명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조선적의 유아 2명이 일본 국내에서 납치된 사실도 밝혀졌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한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새로이 납치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다면 북한 측에 대해 적절하게 제의함과 동시에 피의자 특징을 포함해 납치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 (2) ‘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 시행(2006년 6월)

이 법률은 납치문제를 비롯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납치문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납치문제 등

의 실태를 해명하고 이를 억제할 것을 목적으로 2006년 6월 23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납치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 외에도, 납치문제 등의 계몽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몽 주간(12월 10일~16일)의 창설 및 같은 주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몽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몽 주간에는 정부나 NGO가 여러 회의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일본 국내외에 납치문제 등의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 (3) '납치문제 대책본부'의 설치(2009년 10월)

2009년 10월, 일본 정부는 기존의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폐지함과 동시에, 납치 문제에 관한 대응을 협의하고 생존자의 즉시 귀국을 위한 시책, 안부불명의 납치 피해자에 관한 진상규명 및 이 문제에 관한 전략적 활동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기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새로운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본 대책본부는 본부장으로 총리대신, 부분부장으로 납치문제 담당대신, 내각 관방장관 및 외무대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대책본부가 중심이 되어 기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동대책본부는 동년 10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의 체제에 대해서, 특히 정보 관계의 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하나가 되어 추진해 나아갈 것을 확인했다. 또 2010년 11월의 제4차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동년 6월)에서 확인한 '납치문제에의 대처'를 바탕으로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본부장 지시를 제시했다. 이 방침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하나가 되어 임할 것은 2011년12월 제6차 회의에서도 확인되었다.

일본 정부는 '일조평양선언'에 입각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한시라도 빨리 귀국을 실현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일관된 생각 아래, 북한 측에 모든 기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조속히 내리도록 강력히 촉구해 갈 것이다.

# 일본 정부 인정의 17 명에 관한 사안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17명에 관한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당시의 나이와 실종 장소). 일본 정부가 2003년 1월에 시행된 법률에 근거하여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은 당초 15명이었으나, 수사 및 조사 결과 2005년 4월 27일에 다나카 미노루(田中実)씨, 2006년 11월 20일에 마쓰모토 교코(松本京子)씨가 각각 추가로 인정되었다.

## 1. 1977년 9월 19일 우시쓰 (宇出津) 사건

- 피해자: 구메 유타카(久米裕)씨 (52세, 이시카와현(石川県))
- 이시카와현 우시쓰 해안 부근에서 실종.
- 북한 측은 구메씨의 북한 입경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수사 당국은 주법격인 북한 공작원 김세호에 대해 2003년 1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 수배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2006년 2월의 일북포괄병행협약에서 북한 측은 김세호에 대해 '이런 사람은 알지 못한다'며 일본의 관련정보 제공을 전제로 해당 인물 특정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회답했다.

피해자



피의자



김세호

## 2. 1977년 10월 21일 여성 납치용의사안

- 피해자: 마쓰모토 교코(松本京子)씨 (29세, 돗토리현(鳥取県))
- 자택 부근의 손뜨개 교실에 나간 뒤 실종.
- 2002년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일북국교정상화교섭 제12차 본회의 및 2004년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일북실무자협약에서 일본은 북한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제3차 협약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입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회답이 있었다.
- 2006년 11월에 마쓰모토 교코씨의 납치가 인정된 이후, 일본 정부는 북한 측에 즉시 귀국 및 사안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회답이 없다.



## 3. 1977년 11월 15일 소녀 납치용의사안

- 피해자 :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씨 (13세, 니가타현(新潟県))
- 니가타시에서 하교 도중 실종.
- 2004년 11월에 열린 제3차 실무자협약에서 북한 측은 메구미씨가 1994년에 사망했다며 메구미씨의 전 남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메구미씨의 '유골'이라 주장하는 뼈를 제출했으나, 뼈의 일부에서 메구미씨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 2006년 4월에는 일본 정부가 실시한 DNA검사로 요코타 메구미씨의 전 남편이라고 하는 인물이 1978년 당시 고교생으로 한국에서 납치된 한국인 납치피해자 김영남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 4. 1978년 6월경 전 음식점 종업원 납치용의사안

- 피해자 : 타나카 미노루(田中実)씨 (28세, 효고현(兵庫県))
- 유럽으로 출국한 뒤 실종.
- 2002년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일북국교정상화교섭 제12차 본 회의 및 2004년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일북실무자협약에서 일본은 북한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제3차 실무자협약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입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회답이 있었다.
- 2005년 4월에 다나카 미노루씨의 납치가 인정된 이후, 일본 정부는 북한 측에 즉시 귀국 및 사안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회답이 없다.



## 5. 1978년 6월경 리은혜 (李恩惠) 납치용의사안

- 피해자 :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 (22세, 불명)
- 1987년 11월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북한 첩보원 김현희는 '리은혜'라는 여성으로부터 일본인으로서의 행동거지를 배웠다고 주장했다. 리은혜는 행방불명이 된 다구치씨와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 북한 측은 다구치씨가 1984년 하라 다다아키(原勲)씨와 결혼했으며, 1986년 하라씨가 병사한 후 곧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자료 등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009년 3월, 김현희씨와 이즈카 가츠키의 면담에서 김씨로부터 다구치씨의 안부와 관련된 중요한 참고정보(주)를 새롭게 입수하였으며, 현재 동 정보에 대한 확인작업이 진행 중이다.
- (주)김씨의 증언: "87년 1월에 마카오에서 돌아와서, 2월인가 3월 경에 운전수로부터 다구치씨를 어딘가 잘 모르는 곳으로 데려갔다라는 말을 들었다. 86년에 혼자 사는 피해자를 결혼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구치씨도 어딘가에 가서 결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6. 1978년 7월 7일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 피해자: 치무라 야스시(地村保志)씨 (23세, 후쿠이현(福井県))
- 치무라 후키에(地村富貴恵, 결혼하기 전의 성: 瀨本)씨 (23세, 후쿠이현)
- '돌이서 데이트하러 간다'며 외출한 이후 실종.
- 두 사람은 1979년에 결혼. 2002년 10월 일본으로 귀국. 딸 1명과 아들 2명은 2004년 5월 귀국.
- 수사 당국은 납치실행범인 북한 공작원 신광수에 대해 2006년 2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 수배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신광수

### 7. 1978년 7월 31일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 피해자: 하스이케 가오루(蓮池薫)씨 (20세, 니가타현)  
하스이케 유키코(蓮池祐木子, 결혼하기 전의 성: 奥土)씨 (22세, 니가타현)
- 하스이케씨는 '잠깐 나갔다 금방 돌아오겠다'며 외출한 채 실종. 마찬가지로 오쿠도(奥土)씨도 외출한 채 실종.
- 두 사람은 1980년에 결혼. 2002년 10월 일본으로 귀국. 딸 1명과 아들 1명은 2004년 5월 귀국.
- 수사 당국은 납치실행범인 북한 공작원 자칭 고즈미 겐조(小住健藏), 통칭 최순철에 대해 2006년 2월에, 또한 공범자인 당시 조선로동당 대외정보조사부 대일과 지도원 자칭 한명일, 통칭 한글년 및 통칭 김남진에 대해 2007년 2월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 수배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피의자



통칭 최순철



통칭 한글년



통칭 김남진

### 8. 1978년 8월 12일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 피해자: 이치카와 슈이치(市川修一)씨 (23세, 가고시마현(鹿児島))  
마스모토 루미코(増本るみ子)씨 (24세, 가고시마현)
- '바닷가로 석양을 보러 간다'며 나간 채 실종.
- 북한 측은 1979년 7월에 두 사람이 결혼했으며, 이치카와 슈이치씨는 같은 해 9월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마스모토 루미코씨는 1981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9. 1978년 8월 12일 모녀 납치용의사안

- 피해자: 소가 히토미(曽我ひとみ)씨 (19세, 니가타현)  
소가 미오시(曽我ミヨシ)씨 (46세, 니가타현)
- '돌아서 쇼핑하러 간다'며 나간 뒤 실종.
- 히토미씨는 2002년 10월 일본으로 귀국. 남편 켄킨스씨(미국인)와 2명의 딸도 2004년 7월 귀국.
- 북한 측은 소가 미오시씨는 입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수사 당국은 납치실행범인 북한 공작원 통칭 김명숙에 대해 2006년 11월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 수배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통칭 김명숙

### 10. 1980년 5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 남성 납치용의사안

- 피해자: 이시오카 도오루(石岡亨)씨 (22세, 유럽) 마스키 가오루(松木薫)씨 (26세, 유럽)
- 두 사람 모두 유럽 체재중인 1980년에 실종. 1988년 이시오카씨가 일본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폴란드 소인)가 도착해 이시오카씨, 마스키씨, 그리고 아리모토 게이코(有本恵子)씨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 왔다.
- 북한 측은 이시오카 도오루씨가 1988년 11월 가스 사고로 아리모토 게이코씨와 함께 사망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마스키 가오루씨에 대해서도 1996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2002년 9월 및 2004년 11월에 열린 제3차 일북실무자협의의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측은 마스키씨의 '유골'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출했으나, 그 중 일부에서 마스키씨와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 수사 당국은 납치실행범인 '요도호' 범인들의 처 모리 요리코(森順子) 및 와카바야시 사키코(若林佐喜子, 결혼하기 전의 성: 黒田)에 대해 2007년 6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 수배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모리 요리코



와카바야시 시키코

### 11. 1980년 6월 중순 신광수 (辛光洙) 사건

- 피해자: 하라 다다아키(原敏晃)씨 (43세, 미야자키현(宮崎県)).
- 미야자키현 내에서 발생.
-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공작원 신광수가 한국 당국에 하라씨의 납치를 인정하는 증언을 했다. 수사 당국은 신광수에 대해 지금까지 하라씨 행세를 했다는 옹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 수배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해 왔으나 2006년 4월에는 새로이 납치용의 주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북한 측은 신병인도에 응하기는커녕 그를 '영웅'으로 칭찬하고 있다. 또 수사 당국은 하라씨 납치용의 공범자인 김길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국제 수배하는 등 필요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 북한 측은 하라씨가 1984년에 다구치 아에코씨와 결혼, 1986년 간경변으로 사망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광수



김길옥

### 12. 1983년 7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 여성 납치용의사안

- 피해자: 아리모토 게이코(有本恵子)씨 (23세, 유럽)
- 유럽에서 실종. '요도호' 범인의 전 처는 북한 당국과 협력해 아리모토씨를 납치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납치실행범인 '요도호' 범인 우오모토 기미히로(魚本公博, 결혼하기 전의 성: 安部)에 대해 2002년 9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 수배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 북한 측은 아리모토씨가 1988년 11월 가스 사고로 이시오카 도오루씨와 함께 사망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오모토 기미히로



블루 리본

파란 색은 납치피해자의 조국인 일본과 북한 사이에 가로놓인 '일본해의 푸른 빛'을 상징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을 유일 연결하는 '파랑 하늘'을 상징합니다.

## 일본국 외무성

우편번호 100-8919 도쿄토 치요다쿠 카슈미가세키 2-2-1

전화 + 81-3-3530-3311 <http://www.mofa.go.jp/>

2012년